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측의 경직성 탈피가 관건이다

해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 보려던 북한은 지난해 완전히 '동미봉남'으로 돌아섰다. 자신들이 주도권을 갖는 데 있어 한미 관계를 벌리고 우리를 초조하게 하면서 미국과의 담판에 올인하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를 결산하고 올해를 전망해 보건대, 북한의 전략은 정세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반전시키는 데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 같다. 연말 시한을 설정했지만 미국의 유연한 조치를 이끌어 내지 못했고 남북 관계 역시 합의의 상황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북한이 내놓은 것이 '정면돌파전'이다.

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길은 제재 해제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제재가 계속되더라도 버티는 자력갱생식 경제 구조 조립의 상황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북한이 내놓은 것이 '정면돌파전'이다. 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길은 제재 해제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제재가 계속되더라도 버티는 자력갱생식 경제 구조 조립의 상황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북한이 내놓은 것이 '정면돌파전'이다.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 포기 불가론과 남북

관계 단절, 대북 정책의 실패로 연결시키려 한다. 물론 올 한 해도 매우 불투명하고 유동적인 상황은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오랜 북한의 협상 전략이나 최근 일련의 행보로 볼 때 북미 대화와 남북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우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를 우선 조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연말연시 레드라인의 경계선을 넘지 않았고 북미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축하 친서를 보냈고 북한이 즉각 반응을 보인 것도 북미 정상 간의 신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로이다. 통상 신년사를 통해 대남 정책의 기초를 공표하던 것을 생략하고 정세 변화를 관망하고 있다. 북한은 대남 선전매체를 통해 대남 비난을 하고 있으나 당국의 공식 입장은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수준에 비하면 수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신년사와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차분한 정세 판단과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남북 관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북미 간 교차 국면을 해소하는 데 있어 우리의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였다. 제재 국면이지만 남북 간에 할 수 있

는 협력을 전개하면 북미 대화의 긍정적 인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가 순순한 구조로 발전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 역도 및 탁구 선수권 대회 초청, 올림픽 단일 팀 구성,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비무장 지대의 국제 평화지대화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개별 관광 등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독자적 영역의 협력 사업들을 제안하였다.

문 대통령의 제안은 대부분 남북 간 이 미 합의 사항이라는 점에서 의지만 있다면 이행이 어렵지 않다. 한미 공조를 저해하거나 대북 제재에 정면 위배되는 것을 하지는 것이 아니다. 남북 간 합의에 의해 독자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 해서 분위기를 만들고 영역을 넓혀 나가자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마치 제재나 한미 관계를 훼손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님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북한의 호응이 중요하다. 경직성을 탈피하여 우리 대북 정책 기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 북한이 북미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정상 국가로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탄탄한 남북 관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종교칼럼



황성호
신부·광주가톨릭 사회복지회 부국장

떠나야 한다

는 것이 아니라, 사제들의 절대적인 모델이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모든 사제들은 사제가 될 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겠다고 서약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과도 같은 서약이다.

그러나 사제들도 작고 나약한 인간 존재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서약했지만, 인간적인 나약함에 항상 주저하고 갈등하는 똑같은 인간 존재이다. 그래서 사제들이 임기를 마치고 떠나야 할 때, 여러 복잡한 마음까지 들 때가 있다. 언젠가 "떠나지 않는다면, 어떤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특히 사제의 길을 준비할 때, 익숙하고 몸에 배인 곳을 떠나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자신의 삶도 정체되지 않고 쇄신할 수 있다고 배웠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말은 진실이다. 가득 채워진 그릇에 다른 어떤 것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 고인 물이 썩어버리는 것처럼 비움 없이 채우려 한다면 과유불급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

다. 쉽게 말해 각자의 삶에서 비워 내고 떠나보내는 작업을 잘해야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낮추어야 높아질 수 있다'는 말도 진리다. 항상 높은 곳을 향하는 우리의 모습은 매물차고도 무섭다. 더 좋은 곳을 찾는 것, 더 높은 곳을 추구하는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는 자부한다. 그러나 좋은 것을 찾다 보니 나쁜 것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높은 곳을 추구하다 보니 낮은 자들의 아픔에 무관심하고, 많은 것을 채우다 보니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기득권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자아낸다. 자기가 신이 나 된 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인데,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서 이 어리석음을 '교만'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 어리석음에 의해서 발생된 '교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못하고 거짓과 폭력으로 속이고 짓밟게 되는 악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인간의 악한 모습을 만들어 내는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오래 머물다 보면, 익숙해지고 주저않는다. 그리고 오래되고 익숙한 것은 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당연하다고 생각

하여 감사함까지도 있어버린다. 그래서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이들이 되는 것이다. 결국 '교만'을 이길 수 있고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익숙해지고 편안해진 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필자는 어제 3년 동안 살았던 영암 신부 성당을 떠나 새로운 소임지로 부임했다. 항상 떠남을 준비해야 하는 삶이라 이제 좀 익숙해질 만도 한데, 역시 익숙해졌던 곳, 정든 곳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다. 신자들과 나누었던 수많은 대화들, 경료와 노고가 깃든 어르신들의 깊은 주름, 아침마다 바라보았던 월출산 등이 영화의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제들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엇에든 감사해야 한다. 그래야 사제는 정체되어 썩어버리는 물이 아닌 생명과 활력이 넘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떠나야 새로워질 수 있다. 버리고 비워야 새로 채울 수 있다.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난 것이다." (마르코 1장 38절)

社說

민주당 전략공천 카드 신중하게 사용해야

21대 총선이 석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필승 전략으로 전략공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울 종로 등 지역구 13곳을 전략공천 대상으로 확정 및 입영,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비무장 지대의 국제 평화지대화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개별 관광 등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독자적 영역의 협력 사업들을 제안하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몇몇 지역구를 중심으로 전략공천설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현재 전략공천설이 나오고 있는 지역구는 광주에서는 북구갑과 동남을 등 두 곳이다. 전남에서는 순천과 광양·곡성·구례를 비롯해 적게는 두 곳에서 많게는 네 곳에 달한다. 전략공천 대상자의 이름도 구체적으로 떠돌고 있다. 인구상향선을 초과해 분구가 예상되는 순천시 한 개 선거구가 늘어남다는 것을 전제로 최근 영일한 소방청 전 검사장이 거론된다. 소 전 검사장은 광주 지역으로 투입될 수도 있다 한다. 광양·곡성·구례

는 유력하게 거론되던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출신 투입설이 돌고 있다. 민주당이 전략공천을 검토하는 이유는 거론되는 지역 예비후보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텃밭인 호남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절박함도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략공천 대상자들이 지역 유권자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면 낙산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물며 4년간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유권자들과 눈높이를 맞춰온 예비후보라면 전략공천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부득이하게 전략공천을 하려면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고 고향에서 텃밭을 갈아 온 예비후보들이 납득할 만한 논리를 제공해야 한다. 텃밭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전략공천을 했다가 민심의 역풍을 맞았던 과거의 사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 운전 안전불감 시민은 불안하다

광주·전남 지역 일부 대중교통 운전자들이 운행 중에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버젓이 시청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시민 김 모(여·35·광주시 북구 임동) 씨가 광주일보에 제보한 내용을 보면 '광주 대중교통이 이 지경인가'하는 탄식도 절로 나온다.

김 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탔다가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기사가 운전하는 동안 내내 휴대전화를 거치대에 고정해 놓고 유튜브를 보면서 곡에 운전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운전기사는 김 씨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튜브를 시청하다 급정지도 두 차례나 했다고 한다.

택시뿐만 아니라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0월에는 광주 중앙터미널에서 대전유성버스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휴대전화를 거치대에 끼우고 두 시간가량 유튜브 동

영상을 시청한 것이 적발돼 자체 징계 처리됐다. 같은 해 8월에도 광주와 순천을 오가는 시외버스 기사가 승객 30명을 태운 채 휴대전화로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는 모습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하지만 대중교통 운전자들에 대한 제재는 미약하기 그지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DMB(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등을 시청하다 적발될 경우 벌점(15점)과 소액의 범칙금(버스를 포함한 승합자동차 7만 원, 승용자동차 6만 원, 오토바이 4만 원, 자전거 3만 원)만 부과된다. 대중의 안전을 책임진 대중교통 운전자들을 가중 제재하는 별도 법규는 사실상 없다.

따라서 새로운 법규 마련 등 대책이 절실하다. 아울러 경찰과 행정 당국은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해 승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국군의 해외 파병은 1964년 베트남전 참전이 처음이었다. 이후 점차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해외 파병은 다국적군 성격으로 참여하는 형태와 유엔 평화유지군(PKO) 자격이나 국방교류 및 인도적 지원 차원 등 세 종류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1950년 6·25전쟁으로 16개 유엔 회원국의 병력 지원을 받았고, 이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파병은 전투병보다는 공병이나 수송단, 의료지원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금도 국제적 역할에 따라 우리 정부의 결정으로 파병을 하지만, 지난 역사 속 파병은 대부분 강대국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전투병을 파견한 약소국의 흑역사였다.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는 1281년 일본 정벌을 위해 병선 900척과 뱃사람 1만 5000명, 군사 1만 명, 군량 11만 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벌 과정에서 태풍으로 일본 정벌이 실패하면서 고려는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조선 시대에도 1618년 명나라는 후금을 치기 위해 병사 1만 3000명을 요구한다. 이때 광해군은 강홍립 장군을 파견하

면서 병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말 것과 상황 불리 시 후군에 투항할 것을 지시한다. 특히 후군 투항 시에는 약소국으로서 명나라의 압력 탓에 파병한 것이라는 불가피함을 역설토록 했다. 강홍립 장군은 광해군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고 우리 병사들의 피해는 미미했다.

조선 효종 때인 1654년에는 청나라의 요구에 못 이겨 조총군 100명과 초관(종 9품 장교) 50명을 파견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를 상대로 한 1차 나선 정벌과 1658년 조총군 200명·초관 60명을 파견한 2차 나선 정벌에서 의미 있는 전공을 세운다. 다만 나선 정벌은 북벌론자인 효종이 청나라를 치기 위해 양성한 군대를, 청나라를 위해 사용한 아이러니한 사건이기도 하다.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파병 여부를 결정하되,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채희종 사회부장 chae@

기고



이평형
광주시 복지건강국장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변화와 광주시 정책

을 수립해 추진하게 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시기이다. 1990년대가 그때이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기본적 복지 서비스 확충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 재활의 기초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2000년대로 장애인 정책의 확대 발전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장애수당 도입,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활동보조지원 사업 실시, 장애인 연금 제도 실시 등 장애인의 생활 영역 전반으로 정책의 범위가 확대, 발전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시 또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따뜻한 광주'를 만들겠다는 대원칙 아래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다. 관내 4.8%를 차지하는 7만여 명의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언제 어디서나 자신들이 영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자립 생활 이념 확산을 근본으로 설정하였다.

최근 여건들을 살펴볼 때, 대규모 시설 보호에서 탈시설화 및 거주 시설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 보장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대졸자 비율도 지난 2014년 23%에서 2019년 35%로 높아져 교육 수준도 급격히 향상하는 등 다양한 복지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를 해소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자립기반 조성 등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차별 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애인이 행복한, 주체적이고 동등한 삶'을 비전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 조성,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인권 공동체 구현, 교육·문화·체육 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 기반 구축,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장애 유형별 자립 생활 및 건강권 확대 등 5대 전략을 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15개 중점 과제와 43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다. 우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고용 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권익 강화를 위해 확대 피해자 센터를 설치하

고 교육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및 24시간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이다. 장애인 평생 교육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프로그램 지원 및 인력을 추가 배치하며,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수련 시설을 건립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고려한 장애인 복지 회관을 건립하고 장애인 청년 통장은 물론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유치와 청각·언어 장애인 복지관 건립으로 복지 서비스 확대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은 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하여 각 분야 전문가와 해당 분야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소관 부서에서 실행 여부를 논의하여 수립되었다. 향후 사업 추진 부서에 세부 과제 실행을 위한 연차별, 단계별 추진 계획을 세우도록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능하는 척도이다. 장애인들이 행복해야 광주가 행복한 도시가 된다. 장애인들이 광주에서 꿈을 꾸며 희망을 만들어 갈 때 광주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1(광)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영지원국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